

목 차

■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

Executive Summary	1
1. 동북아시아의 잠재력	2
2. 동북아시아의 현상에 대한 인식	3
3. 과제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	7
4. 보다 밝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10
< 토론 >	14
■ HRI 경제 지표	25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

1. 동북아시아의 잠재력

- 한·중·일 삼국은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3 나라의 GDP 규모는 전세계의 17%이며 교역량은 13%를 차지
- 3 나라의 수입 총액은 1조 2,400억 달러로 시장 규모와 매력도가 매우 높음
- 3 나라의 역동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 동북아시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함

2. 동북아시아의 현상에 대한 인식

- 한·중·일 3국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문화적 상호 교류 또한 활성화되고 있음
- 한편 이 지역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의 급성장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학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에는 냉전의 잔재와 전전(戰前)의 부(負)라는 역사적 과제가 남아 있음
-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시장경제화 등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新내셔널리즘의 등장에 주목해야 함
- 북핵과 같은 국가안전 보장, 국제적 조직 범죄, 자원 쟁탈전, 자연 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범세계적 과제도 간과할 수 없음

3. 과제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

- 동북아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공유한 나라들이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가져야 함
-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양국 간의 협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
- 9월 6자회담의 합의 도출은 한미일 협조 체제의 결과이며,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 한일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교역액과 직접 투자액은 착실히 증가하고 있음
- 경제 교류는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규격 및 기준의 통일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임

4. 보다 밝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 과거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반성과 배려는 일본의 공식적인 견해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착실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
- 한일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행정기관, 또는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함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12월 9일
- 연사 : 주대한민국일본국특명전권대사 大島 正太郎(오시마 쇼타로)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동북아시아의 잠재력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오늘은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이란 모임의 이름을 바탕으로, 또 내주에는 말레이시아의 콰라룸푸르에서 사상 첫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중요한 시기에 즈음하여, 그야말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중·일 3국은 이미 전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ASEAN 회원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호주를 포함한 16개국이 참가할 예정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예를 들어 GDP는 전세계의 약 17%, 교역량은 약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나라의 수입총액은 1조 2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굉장합니다. 이런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동북아시아의 3국이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나라의 역동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 10년 후의 그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2. 동북아시아의 현상에 대한 인식

① 발전하는 동북아시아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난 수년간, 해마다 연 9%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연 7%의 확대를 계속하면 10년 후에는 배로 증가한다”는 수식으로 보아, 연 9% 성장률 지속의 의미는 큼니다. 또 이곳 한국은 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또한 버블 붕괴 후,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 침체를 가까스로 벗어나 투자 및 소비 등의 내수에 힘입은 활력 있는 경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3국간의 경제관계는, 한국에서 볼 때 최대의 수출국이 중국(일본은 3위)이고, 최대 수입국이 일본(중국은 2위)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의 대한(對韓) 투자국입니다. 또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반대로 중국은 일본에게 있어 제2의 교역국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문화적 상호
교류 또한 활성화
되고 있음

이러한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는 비단 경제에만 그치지 않고, 최근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한일 간에는 국교정상화 당시 연간 1만 명에 불과하던 사람의 왕래가 이제 하루 1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 간에는 연간 400만 명, 한국과 중국 간에는 연간 300만 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 J-POP, 중국영화 등이 각국에서 열풍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국의 언어를 다투어 공부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또, 이러한 한·중·일 간의 음악이나 문화의 흐름이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하고, 서비스 분야의 무역확대에도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물류, 돈과 같은 경제, 혹은 정보나 문화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발전해가는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는 바로 이곳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가장 활기 넘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희망과 자신에 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②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국을 현재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한편 이 지역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첫째로,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 변화입니다. 중국은 유사 이래 19세기까지 거의 한결같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뚝 선 세계의 선진국이었으며 동북아시아의 거인으로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들어, 중국은 처음으로 도상국의 위치로 전락해 이 지역의 역학에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이른바 ‘예외적인 100년’ 이 경과한 21세기의 오늘, 경제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다시금 동아시아의 역학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 규모 때문에 글로벌한 국제관계의 위상 변화를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의 글로벌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사이의 관련은, 경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님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의 원천으로서 환영하며, 중국이 세계경제로 통합된 것을 큰 기회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러한 역학의 변화 속에서 중국 자신이 국내 정치면에서의 개혁이나 군사면의 투명성 같은 문제에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해 가느냐 하는 점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발전을 생각함에 있어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에는 냉전의 잔재와 전전의 부(負)의 유산이라는 과제가 남겨져 있음

둘째로, 이른바 ‘냉전의 잔재’와 ‘전전(戰前)의 부(負)의 유산’이라고도 할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을 이 지역의 특수성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역에 엄연히 남겨진 과제입니다. 무릇 이들 문제는 민족통일이라는 저마다의 비원(悲願)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피해 갈 수 없는 국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역에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남겨진 역사의 상처가 존재하는 것도 일본국 대사로서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전(戰前)의 부(負)의 유산’은 일본이 각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이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생각하는 데 있어 피해 갈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 움직임과 새로운 내셔널리즘이 등장하고 있음

셋째, 앞의 문제와도 관련해, 국가 정체성과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일본, 중국에서, 저마다의 사정은 별개로 치더라도, 하나같이 자국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려는 공통의 커다란 흐름이 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종료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우리 3국은 다 같이 가난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정된 역할에서 시작해 지난 60년 동안 저마다가 믿는 방향으로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커다란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국제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러한 성과로 인해 생겨난 풍요한 ‘신(新)중류층’을 중심으로 자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새삼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냉전이 끝나고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발전

에 전념해, 이른바 세계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자국의 역사와 전통의 의의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냉전체제 후의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국이나 자국민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해갈 것인가, 반세기 이상에 걸쳐 확립해온 정치 및 사회제도, 혹은 정치 및 사회 체질 같은 것을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 등의 논점입니다.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시장경제화 등으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한국도 대미관계, 과거사 청산, 정치개혁 등의 면에서 현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논의 중인 헌법개정 문제도,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우경화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자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그간 터부시해오던 것을 뛰어넘어 논의해가자는 일련의 전향적인 움직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에서도 정체성의 새로운 정의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국민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생각함에 있어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의 이러한 정체성의 모색이 때로 편협한 내셔널리즘으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장, 국제적 조직범죄, 자원쟁탈전, 자연재해 및 질병과 관련된 범세계적 과제도 간과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현상을 생각함에 있어서 새로운 글로벌 과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 면에서는 핵 비확산문제나 종래의 군사적 위협을 대신하는 국제 테러리즘, 마약 및 인신매매 등의 국제적 조직범죄 등에의 대응입니다. 또 경제면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문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에이즈와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전염성 질병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이들 과제는 바로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니다만, 특히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정치적, 법적인 틀에서 다양성을 지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국가를 초월하여 보다 심각하고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 일본,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가 처한 현상과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커다란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로에 선 동북아시아’에서 숙명적인 이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3. 과제 극복을 위한 한일 협력

① 한일 협력의 중요성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공유한 나라들이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가져야 함

이 같은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고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 및 방향성을 도출해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무엇보다도 기본인식이나 가치관을 공유한 나라들이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0년에 이르는 교류를 바탕으로 역사와 전통면의 유사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시장경제국가입니다. 또한 다함께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나라는,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달리 없습니다. 저는 물론 한·미·일이 공동으로 특정한 나라에 대항한다거나, 혹은 이 지역의 역학에 새로운 균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냉전 하에서의 정치적 사상의 대치나, 그리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력

균형론의 발상을 뛰어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국민차원의 굳건한 신뢰심에 입각한 리더십이 공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눠 드린 얼마 전 아소(麻生) 대신의 강연문 속에서도, 대신은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 가치관의 기본적인 곳을 공유하고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국은 아시아의 2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기개를 가지고, 함께 아시아의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② 한일 협력의 구체적 사례

9월 6자회담에서의 합의 도출은 한·미·일 협조 체제의 결과이며,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

그 같은 한일 협력의 구체적 사례로는, 우선 북한 문제를 그 예로 들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결과,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우리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과 같은 안전보장 문제라든지 납치, 테러 등의 제반 현안을 해결하여 미·일 양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장래에 있어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9월의 6자회담에서 일정한 합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진전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미·일이 협조하며 수행해온 역할은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은 이 합의에 의거해 모든 핵무기 및 기존의 핵계획의 폐기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를 주요국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 및 타당성을 증명하는 길이며, 6자회담이 북한문제 해결 후에도 동북아시아 지

역의 평화와 안정의 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래의 안전보장의 틀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기본이념에 뒷받침된 것이어야 함은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로서는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간 FTA 등 경제분야에서 양국의 연대로 교역액이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음

다음 또 하나의 구체적 사례로는, 양국의 경제면에서의 연대 강화, 특히 한일 FTA를 들고자 합니다. 한일 간의 총 교역액은 최근 5년 사이에도 착실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S-LDC)과 HOYA 등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4배 이상이나 되는 22.5억 달러를 기록, 비약적으로 증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만성적 대일 적자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에 대한 일본의 투자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양국이 지닌 잠재력으로 보자면 극히 사소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장차 양국에 의한 FTA가 실현되면, 1억 7천만 인구나 5조 달러의 GDP를 보유하는 공동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령 거대하게 느껴지는 인구 13억의 중국시장이 GDP로 봤을 경우 대략 1조 6천억 달러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5조 달러라는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일의 경제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간주했을 경우, 지난해 한일 양국의 미국, 중국, ASEAN, EU와의 총 교역액은 각각 미국과 약 2,600억 달러, 중국과 약 2,470억 달러, ASEAN과 약 1,870억 달러, EU와 약 1,650억 유로로서, 중국에 대해서는 1위, EU에 대해서도 3위의 총 교역액이 됩니다. 이들 수치는 한일 양국의 경제가 일체화하면 세계경제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지니게 되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연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규모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국간 시

경제교류는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뿐만 아니라 규격 및 기준의 통일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임

장이 일체화하면 경제활동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일 경제의 활성화나 투자처로서의 매력ى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일 FTA 협상을 통해 경제구조개혁이 진행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높은 경제체제가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 양국 간의 물건이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양국의 제품과 식품 등의 규격이나 기준의 통일 및 표준화라든지, 더욱 자유로운 사람의 이동을 위한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하네다 간 항공편 수도 늘어나 양국 비즈니스 관계자의 당일 왕래도 가능해졌으며, 그 결과 앞으로 양국의 기업이 연대할 가능성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일의 경제연대에 의한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한일 협력 기반으로서의 FTA 실현을 향해 더 한층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일의 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향한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4. 보다 밝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① 역사 문제의 극복을 향해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지닌 한일 협력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역시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는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맨 첫머리에서 약속 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본인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과거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반성과 배려는 일본의 공식 견해임

사로 인해 안겨드린 고통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로서 늘 반성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함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간 일본의 공식 견해로서 거듭 표명되어 왔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에 가로놓인 불행한 역사는, 어떠한 정부의 공식 견해로도 일조일석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상대에게 자신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서 오는 조바심과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이 쌓여 양국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이끄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일본은 전후 60년 동안 평화국가로서 일관된 길을 걸어왔으며 굳건한 민주주의 사회가 이를 지탱하였다는 것입니다. 전후 일본의 정치는, 1947년에 시행된 현행 헌법에 따라 전전의 정치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통치 양식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 헌법은 국민 주권, 의회민주주의, 기본인권의 존중, 사회적 공정, 그리고 평화주의와 국제협조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국가 구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본원리는, 전전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초래한 1989년에 시행된 이른바 ‘메이지 헌법’에 드러난 국가 관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947년의 헌법 제정은, 일본의 일부 헌법학자들이 ‘혁명’이라 부를 정도의 대변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듬해인 1948년의 대한민국의 출범이나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방향성에 관한 근본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즉 현행 헌법 하에서는, 기본원리에 입각해 군국주의의 재래(再來)를 막을 열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어떠한 개헌 논의 속에도 이 기본원리에 대한 의문은 일체 없습니다. 전후 단 한 사람의 인명도 빼앗은 적이 없고, 단 한 발의 탄환도 발사한 적이 없는 자위대가 과거의 일본군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 국민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국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불행한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일본은 착실한 노력을 계속해왔음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발로로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정부와 협력하면서 지난 역사로 말미암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 착실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비명에 가신 분들의 유골 봉환 사업이나,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지원,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문제, 그리고 한센병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갈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된 분들로서는 일본의 대응에 심분 만족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일본의 부단한 노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일 양국은 지금, 역사공동연구라는 도전적인 과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1기 공동연구에서는, 여러모로 격렬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인 제2기 공동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교과서 소위원회를 설치해 서로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쉽게 성과를 낳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만, 쌍방의 전문가에 의한 솔직하고도 냉정한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가 양국에 존재하는 역사문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긴 안목으로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② 국민 교류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핵심임

한편, 한일 양국의 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정부나 행정기관, 혹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닙니다. 역시 양국관계의 가장 중요한 일꾼은 어디까지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상호이해가 관계 강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거듭 지적했다시피, 최근 양국의 인적교류는 눈부시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였다

고 생각합니다. 그 때 서로가 상대 팀을 마음으로부터 응원했던 감동적인 경험은, 그간의 한일 양국의 국민정서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우정의 해의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전반기의 역사를 둘러싼 갖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에도 직면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행사를 합쳐 모두 700여건의 방대한 사업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노력에 힘입어 우정의 해는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9월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한일 축제 한마당’ 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춤추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던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떠올리곤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정의 해가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중견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류, 시민 및 풀뿌리 교류, 일본어교육 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을 목표로 내년 이후 ‘한일교류 5개년 계획’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차원의 교류를 더욱 내실 있게 하고자 항공 수송능력의 확대나 사증면제문제 등의 제도적인 개선에도 가능한 한 적극 대처해가려고 합니다.

한일간 협력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핵이 될 것임

오늘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 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미래상’ 을 그리기 위한 의지와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달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같은 양국의 협력이야말로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데 하나의 중핵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론

(김영작 국민대학교 교수) 오늘 오시마 대사님의 강연도 여러분 앞에 이미 자료로 나가 있는 외무 대신의 기본 발상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동북아 전체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한일 관계와 동북아 3국간 협력이 얼마나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전제하시고 앞으로 공동의 과제를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토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양국간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양국 지도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필요함

우선 한일 양국, 특히 양측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의 동북아를 위해서 한일 양국 또는 한·중·일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당위론적 과제를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역사 인식의 문제와 각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상징되는 역사 문제, 그리고 양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셔널리즘, 각 국의 양상이 다르지만 내셔널리즘의 부상으로서 인해서 제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배경이 되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양국 지도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탈 냉전기를 맞아서 냉전시대의 한일 관계를 묶어놓고 있던 큰 틀이 기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냉전기의 한일 관계, 일본은 우리 한국에게는 우선 청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청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분단된 국가로써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환경이 상징하듯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을 정점으로 한 준동맹의 성격을 띤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협력의 대상이 되었던 3중 구조를 지닌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의 국수에 가까웠던 외교의 기본 원칙인 반일과 더불어서 반공이라고 하는 두 원칙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당착의 현실을 덮어주는 형태, 냉전이라는 보다 더 큰 국제상황, 국내외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할 일본의 성격은 점점 줄어들고 준동맹적인 경제협력의 대상으로써 한일 관계가 부각되어 나왔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의 과거가 청산이 되었다고 공식레벨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의 측면이나 국민감정의 측면에서 볼 때 한일 관계는 청산되어야 될 측면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탈냉전으로 한일간 군사동맹이 약화되었고 경제분야에서 평등의식이 강화되었으며, 각국에 내셔널리즘이 부각되고 있음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탈냉전으로 인해서 과거 한일 관계를 묶어주고 있던 준동맹, 군사 동맹으로써의 성격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동맹의 성격에 관한 의미 부여가 굉장히 약해져버렸다는 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등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만 한국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 경제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발전의 수혜를 입은 나라라는 인식과 함께 양국 경제 발전이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국 내셔널리즘의 부각 문제인데 각기 내셔널리즘이 부각되고 활용되는 양상은 다르지만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5분간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일본에서 내셔널리즘이 부각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로벌화의 추세 가운데 적어도 일본의 지도자층에서는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는 측면에서, 일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

중국의 급부상은 일본의 정체성과 외교노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제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상징되는 경제적인 침체는 이러한 글로벌화 속에서의 일본의 정체성 모색과 일본의 진로에 관한 우려를 더욱더 강화시킨 측면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인데 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오늘 오시마 대사님도 그렇고 외무대신께서도 그러셨습니다만 중국의 부각을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봉착하고 있는 측면 중에 가장 큰 건 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편 전쟁 이후 가장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의 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의 색채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일본적인 국민통합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일본과 근린국가의 관계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지도층은 야스쿠니 신사의 상징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함

따라서 일본의 지도층은 야스쿠니 신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그냥 어느 나라에서든지 애국자와 순국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남겨진 국민들의 종교 이념을 표시하는 의미로써 일반화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일본이 과거의 일본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아무리해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있는 A급 전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매우 미묘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전범 내지 과거적인 심벌의 의미를 자꾸 부각시키는 형태에서 국가 정체성을 찾고 통합의 심벌을 찾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실한 자세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논리로써 설명이 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후 일본은 세계 중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의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대사님 말씀대로 사실이지만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일반적인 가치관의 공유 외에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이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 상대편에 일본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일본이 해결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얘기하는 아시아의 실천적인 선구자라는 표현은 상당히 공허한 말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국 지도자들은
내셔널리즘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하
지 말아야 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점 외에 한국의 지도자도 현재의 정권도 그렇고 일본의 지도자들도 일본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상되는 내셔널리즘의 요소를 국내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절제되지 않은 형태로 표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점이 한일 양국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내셔널리즘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쓰러린 역사적인 경험을 얻었다는 것에서 올바르게 교훈을 찾으려면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요소를 국내 정치적인 요소에만 잘못 활용하는 단견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반성의 기초 위에서 한일 양국은 역사의 인식 문제만이 아니라 6자회담의 상징이 되는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아시아의 안보 체제를 냉전적인 동맹체제, 그리고 다자간의 협력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좀 더 평화로운 체제로 이행해 가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공동의 목표와 과제가 있다는 측면을 유념하면서 한일 관계를 어떤 부분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단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이견을 절제된 방법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오시마 대사께서는 21세기 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는데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작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요소 변수 중에서 대두하는 중국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미국과의 관계에만 중시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만 튼튼하면 한국, 중국,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고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이걸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고이즈미 총리나 아소 외상 같은 분들은 아직도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턱도 없는 우월감, 그리고 제국주의적 성향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고이즈미 정부가 아베 신조 정부로 계승이 된다면 앞으로 4, 5년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아시아를 경시하고 미일동맹만 중시하는 이런 자세, 한국과 중국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하던지간에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를 강행하고 미일 동맹에만 치중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야 할 이유를 들라고 하면 수십 가지를 들겠고 한국과 중국도 야스쿠니 참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라고 하면 수십 가지 들 수 있는데, 이런 고이즈미 총리의 아시아 경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오시마 대사께서 말씀하신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한·중·일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군대 보유를 명문화 하는 개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국민대 장명봉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헌법에 평화조항을 개정해서 군대 보유를 명문화한다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일본

국회의 구성을 보거나 일본 정계의 우경화 추세에 비추어 개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까지 김영작 교수님 김영희 대기자님 장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님의 답변이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음은 인정하나 일
본은 아시아를 경
시하지 않음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어디까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답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김영희 대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역시 어렵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지도자 중에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서 아시아를 경시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비판이 있거나 납득이 안 간다는 소리가 있는 건 우리로서도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분이나 아시아 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아시아를 경시하는 것과 문맥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정책을 우리 외교 정책의 하나의 축으로 삼아왔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신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자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영문지의 논조에도 일본이 아까 김 대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경적인 논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작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기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으로써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미 관계를 중시하는 것

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축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가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아시아 국가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중·일의 협력과 동아시아의 협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또 너무 오래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역시 저로서는 경제라는 하부 구조가 정치라는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15년이 일본의 사회나 정치에 미친 영향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 영향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는 그러한 상태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이웃 나라와의 경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일본과 한국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아주 확대되고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원래 우리가 있는 가능성이 약간 억제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관계를 생각할 때 미국도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 정세를 볼 때 미국과 아시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발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장명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명봉 교수께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 하는 점을 우려

일본은 군사적 방위 비용이나 일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면 군사대국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음

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방위 정책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일본 체제에 있어서 자위대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방위 비용이나 일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고 일본이 적어도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는 군사 대국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약간 신중한 말씀으로 대답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두 개의 질문이 문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대의 장달중 교수님의 질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 체제가 강화되는 틀 속에서 한국은 정책적으로나 전략 개념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재정 수석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가 중요함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장달중 교수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미 동맹 관계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선택한 중요한 외교 정책의 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관계를 보편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일미 동맹 관계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작 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미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은 준동맹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오늘날도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강

조한 것과 같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동맹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사이에서도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일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관계 강화에 모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북한간 관계
정상화 문제는 북
한이 국제사회와
통합할 결단을 내
리는 것이 관건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 해 나가느냐 걸림돌이 뭐냐 하는 질문인데, 저는 아직 한반도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자신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어떻게 국제사회와 통합할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결단만 있으면 출구를 찾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북한은 지금 정상화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납치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와 같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납치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전략적인 결단만 했었다면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마지막 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인력개발원의 정준명 사장님은 오랫동안 삼성저팬의 사장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가까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처럼 북한체제나 김정일을 비난하지 않고 두 번이나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유일한 서방 지도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극적인 일을 벌일 것 같기도 한데 가까운 날 임기 내에 또다시 북한 또는 중국을 방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호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간의 FTA의 협상은 암초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농수산물의 개방에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WTO 협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도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일본과 이웃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치계의 정치를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중간 집권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체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이즈미 정권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상 극적인 사변이 있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으면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답이지만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그러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운 문제임

두 번째 질문입니다. FTA와 WTO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오기까지 한국의 영자 신문을 봤습니다. 영자 신문의 기사 중에 한국과 아세안 간의 FTA 문제도 쌀 문제를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습니다. 농수산물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입장이라서 GATT나 WTO 자리에서 항상 서로 손을 잡으면서 협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무역분야를 담당하시는 협상 담당자 중에서 한국의 담당자보다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만의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FTA 협상 당사자 분이 농수산물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의 여지가 너무 적다는 불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FT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농수산물 분야에서 일본의 양보 여지가 적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문제가 어려운 것은 어느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멕시코 사이에서의 FTA 협상도 농수산물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논쟁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멕시코와의 FTA 협상에서도 일본은 막판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협상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협상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왜 농업에 대해서 구조 개혁이 진전되지 않느냐는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이 자리만의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농업 관계자는 그러한 개혁이 진전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한꺼번에 개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개혁의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이것이 올해 마지막 행사입니다. 내년은 아무래도 정치 계절로 접어드는 만큼 이제까지 정책 담당자들 중심의 모임에서 약간의 정치적인 터치를 가미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연말에 시간을 내 주셔서 솔직한 얘기를 나누어 주신 오시마 대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HRI**

정리 및 교열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 02-3669-4008

이상우 선임연구위원 (leesw@hri.co.kr) ☎ 02-3669-4014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P)	2005(E)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6	3.8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2	2.6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5	2.5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1.9	3.1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5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4.3	5.5	
대 외 거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76	110	80	
	통 관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0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00	3,070
	기 준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0.3)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570	2,950
	기 타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4.5)	(14.8)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3.0	3.2	
금 융	실업률 (%)	4.1	3.8	3.1	3.4	3.7	3.6	3.5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0	1,01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2	4.6	